

수상태양광사업 충남도의원 정책간담회 제안

박기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1. 제안 배경

- 한국농어촌공사는 본 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인 수상태양광발전을 '18년부터 5년에 걸쳐 설치 추진 계획 중임
-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또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와 검증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확산되는 것을 막고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함.
-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원칙 속에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월 13일(목)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지속협, 아산지속협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안함.

2.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사업 정책토론회 결과

-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원칙 속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사업 방향 모색 필요
- 수상태양광 사업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면적 제한 등)
- 저수지를 공재로 인식하고 이익 공유 방안 마련 필요 제기
- 충청남도 차원에서 에너지전환 사업을 확장, 논의할 수 있는 공식기구와 방식 필요 제기
- 2018년 7월~8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유럽의 ESTEEM 방법론 적용 가능성 협의 등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방향과 과제

박기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1.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 4,861억원을 투입해 941지구를 대상으로 총 4,280MW의 발전용량 계획
-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85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 신청, 이 중 허가가 완료된 발전용량은 285개 지구, 228MW로 계획 대비 22.8% 확보 상황. 확보된 용량 중 공사자체 경영위원회 심의 완료된 용량은 66MW로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용량은 6.6%.
- 민원이나 한전 계통용량 미확보 등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취하된 발전용량도 41MW에 달하며, 향후 허가 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취하되는 용량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
- 농어촌공사가 발전 사업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발전량은 1,559MW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발전용량이 무려 1,027MW에 달하는 상황
- 농어촌공사는 현재 충남 서산 '대호저수지'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호2지구'와 '나주호' 등에는 현재 용량의 5배에 해당하는 100MW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
- 충남에서 신청된 81건이 신청 지역별로 발전 용량이 다르고 면적 제한이 없는 상황. 아산 저수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47%까지 태양광 발전 계획으로 시군별로 차이가 심한 상황.

2.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문제점

- 계획 전 사전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협의 없이 진행
- 전국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 전체 사업 신청 후 주민이 반대하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제외하는 방식 추진
- 농어촌공사의 재원확보 방침은 올해의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 3MW 초과 발전량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지체가 예상
- 농어촌공사의 태양광발전 사업 중 1MW 초과 발전 사업지구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수가 237명인데 가용 인력이 86명에 불과해 대안 마련 시급.
- 농어촌공사가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재원확보, 필요 시간, 인력 등 충분한 연구 부족

-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써 주객 전도의 상황. 농어촌공사는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및 정비, 농어촌용수와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어업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 농지 기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거액을 차입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농어촌공사 설립 취지와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3.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과제 및 방안

1) 사업 추진 절차와 과정 및 진행 방식 문제 : 투명한 정보 공개 등 민주적 진행 필요

- 사전 주민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전체 저수지를 대상으로 일방적 사업 진행으로 주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 수상태양광 사업 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가 우선되어야 함.
-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참여가 배제되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등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

2) 수상태양광 사업 원칙과 기준 필요

-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 원칙 설정이 필요. 지역에 따라 전체면적대비 발전량, 환경적 영향 고려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상이하게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불신을 과증시키고 있음.
- 아산 송악저수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임에도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낚시터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3)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이익 공유 방식과 원칙 필요

4) 농업용수 및 수생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

- 환경영향 평가 등 수상태양광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사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농업용수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5) 수상태양광 전체 면적 대비 발전량 제한 기준 필요

6) 단계적 사업 확대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7) 충남지역 수상태양광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협의하는 논의 기구 운영 필요. 충남에 에너지전환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 필요.

4.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문제를 통한 에너지전환 과제 및 수상태양광 사업 정책토론 결과

1) 태양광사업 및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가짜 정보

- 에너지전환 가짜 정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응 시급 : 웹홍보물, 교육, 토론 등

2) 에너지전환 사업과 관련해 충청남도 차원의 상설 논의 기구 운영 필요

3) 충남에너지시민센터 운영 및 충남에너지위원회 정비 및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4) 수상태양광사업 정책토론 결과

- 수상태양광은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니다. 수상태양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 수상태양광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과 면적 제한이 필요하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재 진행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저수지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역과 협의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 충남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협의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가 충남도 에너지전환 사업을 확장 논의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실에 근거한 진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료 참고 및 출처>

- 인터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정책 토론회 결과

박기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 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14:00~16:50
- 장소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강의실
- 주최 :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내용
 - 사회 및 좌장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아산지속지속협사무국장)
 - 인사말
황성렬(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박노찬(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
이현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토론
 - 장화선(한국농어촌공사 환경팀장)
 - 안장현(충남도의원)
 - 장명진(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유종준(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홍성민(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임성희(녹색연합 활동가)

박기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아산지속협 사무국장)

서로에 대한 이야기와 소통의 부재, 많은 가짜 뉴스와 오해들이 섞이면서 수상태양광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자고 마련한 자리이다.

황성렬(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 대표)

곳은 날씨에도 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석탄 발전의 50%를 충남에서 발전하고 있다. 충남이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 석탄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석탄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가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큰 이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지키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지역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박노찬(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많은 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화석연료의 문제에서 뛰어넘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체 에너지가 훌륭하지만 이러한 전환점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봐야할 것 같다.

발제1-이현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탈핵 에너지 전환정책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탈핵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도 까지 재생에너지를 30%까지 채우고자 한다. 핵심은 재생에너지는 선진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꼴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20%까지 올리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의 이야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다. 먼저 기존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사용전력량을 추월하는 상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예시로 일본과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이 전력량을 추월하였다. 이미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사업적인 면에서 싸우고 있다.

또다른 문제로 태양광과 풍력만을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들모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해하고 적체적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모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채우지는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공간은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나머지는 에너지 부족량은 차차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태양광에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한 태양광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카드뮴을 도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어떠한 태양광 사업에서도 카드뮴이 들어간 태양광을 수입 판매하고 있지 않다. 태양전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아직 안되서 문제가 있지만 이제 태양광전지 재활용 센터를 만들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서 사용되는 많은 구성물은 재활용이 된다. 현재 세계의 90%이 실리콘으로 만드는 태양광 발기를 사용한다. 국내 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분석 결과는 대부분 불검출이거나 지정 폐기물이하로 나오고 있다. 전자파의 문제는 집에서 발전하는 양은 너무나 미미하다.

태양광 전지 모듈과 경관 배려 문제.

수상태양광은 기본적인 장점이 있다. 녹조 문제도 녹조가 줄어 든다는 연구가 있다. 생물학적인 문제는 일단 장기화의 영향을 연구 해야한다. 하지만 장기 연구가 없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 일단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발전처리 아주 큰 발전의 경우는 문제가 또 틀리다. 중간의 송전 선로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 있다. 분산형 선로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어디에 설치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를 꼭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만과 강화만의 조력 발전소의 경우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다.

소결 :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가짜뉴스를 걸러서 들어야함 ,
수상 태양광의 장기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 필요.
특히 부유체,케이블 등 비패널 분야에 대한 검토 필요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논쟁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융합 문제
적정 수상태양광 용량,송전 선로 문제 등은 이후 시민사회의 주요 논의과제

참가자

:재생에너지의 경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 보고 싶다.

이현석(에너지시민행동 대표)

경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외국에 경우에는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서 경관을 조성하는 틀을 만들고 있다. 특히 태양광 과 물의 반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조사하고 계량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정부에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줬음 한다.

장명진(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 물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논의를 하면서 결정해야한다. 농어촌 공사가 이렇게 밀어 붙이기 식의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상태양광에는 아직 까지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중 생태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할 것 같다. 각종 많은 수상생태가 변화 할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수십년에 걸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에너지를 발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에서 대한 생각을 해야한다. 농수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어 저서는 안된다. 농수는 결국 농작물로 들어가고 그 농작물은 결국 국민들이 먹게 되는 것이다.

발제2-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에 관해서는 원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많은 나라들이 일본과 러시아 체르노빌 사태를 막고자 하는 대안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비율은 단일 변적당 가장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다. 원전은 사고가 나면 매우 심각하고 나질 않아도 많은 방사선 물질이 나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기후 변화 사태가 매우 심하고 여러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수 없다. 지금 큰 환경 문제중 하나가 미세 먼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태양광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농산물중에 하나로 전기를 추가 하였다. 농민들의 생산활동중 에너지 생산을 포함 시킨 것이다. 일본은 비닐하우스에 바로 옆에 태양

광발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망한 골프장에 많은 태양광을 만들. 여러 사진들을 봐 보면 태양광의 경관의 경우 비닐하우스와 큰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현재 충남의 경우 충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의 2배의 발전을 석탄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작년에만 충남에만 6개의 발전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이런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이 2002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적었지만 2018년 현재 15년만에 독일은 에너지 생산의 절반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지금의 3배를 더 늘려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빠르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겠다고 아직도 속도가 늦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양광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의 이론과 논리는 원전을 지키고자하는 미국 단체 내의 블로그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 뒤에는 원전이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연구사례에서는 수상 태양광의 문제는 없다고 나오고 있고 다만 이러한 면적이 10~20%의 경우에만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광 태양광은 면적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2.6%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근거지 중심으로 상호의 전력망으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 나라 생활주변에 지형지물에 맞게 만들어 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전력 사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나 낮아서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수 없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중요한점중 하나는 이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경우 이익 구조의 50%가 농민과 지역 주민의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해결기구를 만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주체하고 토론 논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에 이익을 분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국내의 관건은 지역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익의 공유 평가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유종준(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수상태양광 발전이 수생태계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자료와 현장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수상태양광이 일부 면적을 사용하고 햇빛을 투과하도록 만들어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0년 20년 연구하는 것은 너무 늦는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바로 철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충남의 상황에서는 수상태양광이 알맞은 방법일수 있다.

또한 대규모 전력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 대기업도 뛰어 들어서 에너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수지란 공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

에 지역과 농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의 이익의 혜택을 조금 더 공공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성희(녹색연합 활동가)

수상태양광 모니터링 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어렵다.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의 전체 규모는 637개 997헥타르 770메가와트를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300킬로와트 정도는 협동조합에 넘기게 될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건이 조합원은 5킬로 근처의 90%주민들이 참여해야한다. 이사업을 참여하면 이익은 주민들에게 집적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 일단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좀더 제대로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충북 저수지 반대 운동을 보았다. 이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년에 4800만원이 수익구조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실제로 발전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파악한 것 같다. 수익이 직접적으로 분배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또 이번에 수상태양광 면적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제한 폐지는 문제가 있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100메가가 필요해서 대부분의 태양광발전이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의 하지 않는것에는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절대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지역 발전을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그렇기에 수상태양광문제도 다시 바라봐 주셨음 좋겠다.

참가자

1. 농어촌공사가 전국 모두 수상태양광 발전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
2.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발전금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가?
3. 송악저수지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정된 저수지이다. 이러한 곳에 발전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고려되고 있는가?
4. 끝까지 주민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인가?

홍성민(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댐과 저수지는 지역적인 특징이 다르다. 저수지는 공공지로서 맡긴 것이지 권리를 다준 것이 아니다.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하며 민민갈등을 조장한다. 정보가의 공유된 상태에서 충분한 절차를 따라서 해야만 한다. 서천 지속협에서는 봉선저수지의 생태계 환경을 늘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창오리20만 마리가 찾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전기 사업을 따고 시행하려 하는 점에 있어서 반대를 한다.

장화선(한국농어촌공사 팀장)

공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적 의견으로만 양해된

다면 의견을 말하겠다.

1. 수상태양광 사업은 일시 중단되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농식품부에 내년 1월에 나 오고 있다.
2. 상수원 보호구역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소규모 영향 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추후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준비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
3. 본사가 강하게 주장하여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했다 . 일반적으로 지사가 주도 한다. 이 러한 점이 강하게 보였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다.
4. 모든 논의가 끝나고도 주민의 반대가 끝까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박기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아산지속협 사무국장)

구체적인 설계와 충분한 검토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먼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유되고 사업지를 단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필 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신청 중인 전국 및 충남 지역 현황을 지금이라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화선(한국농어촌공사 팀장)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 정확하게 확답은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이 야기하고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이 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장현(충청남도의원)

충남에서 신청된 81건이 신청 지역별로 다 다른 진행속도가 다르고 지역 면적은 또한 다 다르다. 아산과 예산 또한 심의중에 있다 아산 저수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47%를 덮는다고 한 다. 시군별로 차이가 심하고 경중이 매우 다르다. 면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했는지 의문이 스 립다” 라고 하며 “ 지역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이 중요한데 진지하게 논의 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의회에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할 것이며 주민과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

장명진(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수상생태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데이터는 너무 짧은 시간에 해서 너무 적은 사례 때문에 신 퇴를 할 수가 없다.”며 “녹조를 가지고 말하면 녹조가 줄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녹조도 자연 생태계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녹조의 발생을 해소하고 정화하는것도 저수지의 자 연스러운 기능이다”라고 말하며 “농촌공사의 방법도 문제다. 지사의 공모사업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일률성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보도 자료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황성렬(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많은 단체분들이나 주민들 모두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발제 토론하시는 분들의 생각속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강제적으로 밀어 붙이는 사업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한전이나 국가나 농어촌 공사나 모두 일하는 방법이 모두 똑같이 일하는 것 같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의 절차만을 중요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수렴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농어촌 공사의 각 지사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단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수상태양광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화선(한국농어촌공사 팀장)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이중 농수와 환경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양이원영(환경연합 사무처장)

기존의 발전 사업이나 공기업의 사업으로써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역의 자발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해야될 것 같다. 재생에너지를 손해볼수 없는 방법으로 충분히 이익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이 어떻게 주체로 할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노찬(충남지속협 사무처장)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우리가 개선해나가는 고민을 지혜롭게 모았으면 한다. 충남도가 탈석탄 탈핵 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농어촌공사와 주민들만의 갈등으로 방관하지 말고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탈 석탄의 선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생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데이터들을 얻는 것을 충남도가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